

### 총선 전북 후보 공보물 보니

# 이재명·한동훈 인지도 편승

후보자가 유권자 손과 집까지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홍보물인 '선거공보물'.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모든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자신이 걸어온 이력과 장점 등은 물론 공약과 사진 등도 수록돼 표심의 향방을 가리기도 한다. 자신의 이력과 정보 공약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되는 공보물에 엄청난 공을 들이는 이유다. 4·10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전북 지역 후보자들이 공보물에 당 대표 또는 대통령 등의 유명 정치인 인지도를 이용한 선거전략을 펼치고 있다.

### 이재명 사진 9명 달해 한동훈 사진 6명 사용

3일 뉴시스가 전북 10개 선거구에 출마한 33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공보물을 살펴본 결과 당 대표 또는 대통령 등과 함께 찍은 사진 또는 해당 인물의 이름을 거론한 이는 17명에 달했다. 해당 인물별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명, 윤석열 대통령·이낙연 새로운미래 당대표가 각각 1명씩이

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진을 수록한 이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이었다. 김운덕(전주), 정동영(전주), 신영대(군산·김제·부안), 이원택(군산·김제·부안), 한병욱(익산), 윤준병(정읍·고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 후보 등이었다. 특히 5선에 도전하는 정동영 후보의 경우 사진과 함께 '이재명을 지키고, 윤석열과 맞서 싸울사람'이라는 문구를 담아 노골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거론했다. 이밖에도 무소속 방수형(전주) 후보와 진보당 강성희(전주) 후보

도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보물에 수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담은 이들은 국민의힘 후보들이었다. 전희재(전주), 최홍우(군산·김제·부안), 김민서(익산), 문용희(익산), 강병무(남원·장수·임실·순창), 이인숙(완주·진안·무주) 등이 한 위원장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담은 후보자는 국민의힘 양정무(전주) 후보였으며, 이낙연 새로운미래 당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실은 후보자는 새로운미래 신재용(익산) 후보였다. /뉴시스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1번 나순자 후보, 녹색정의당 전주형 지역구에 출마하는 한병욱 후보와 지지자 등이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전북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새만금 프로젝트 대전환”

녹색정의당 나순자 비례 후보, 고향 전북 찾아 생태관광·교육·의료돌봄 등 3대 비전 제시

전북 출신 보건의료 전문가인 나순자(59)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고향을 찾아 새만금 대전환 계획 등 지역 발전을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다. 고향 출신인 나순자 후보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 녹색정의당 전북도당 한병욱 위원장과 당원 등 20여명이 함께 참석해 녹색정의당의 생태관광, 교육, 의료돌봄 등 3대 분야의 비전을 밝혔다. 나 후보는 “전북을 발전시키겠다고 큰소리쳤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고, 지난 30년 넘게 새만금으로 희망고문만 시키지 않았느냐”라며 “먼저 우리 전북 새만금 프로젝트를 기후정의 관점에서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는 “새만금호 수질개선, 갯벌과 생태계 복원, 수산업 부활,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단지 구축 등이 우리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어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등 지방대학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전북을 의료돌봄 혁신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의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최근 의료 사태와 관련, 나 후보는 “녹색정의당은 지금의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북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공의사들이 언제나 환자 곁을 지키는 공공병원을 전북지역에 5개 권역별로 확충해서 제대로 된 의료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순자 후보는 “정의당이 지난 4년 많은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하지만 이제 바뀌고 있다”면서 “반칙과 꼼수 위성 정당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원칙을 선택한 진보정당, 노동자와 농민, 여성과 약자, 소수자의 마지막 버팀목 녹색정의당을 지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나순자 후보는 전주근영여고, 이화여대, 고려대(석사)를 나와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녹색정의당 노동부대표를 맡고 있다. /뉴시스

### 전북자치도, 시군별 청렴도

#### 고공행진 순회 간담회 추진

전북자치도가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동반상승을 위해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해 강점지표는 더욱 확산시키고 부진지표는 보완하기 위해 시군별 '청렴도 고공행진 순회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순회간담회는 3일 군산시를 시작으로 남원시, 순창군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 출범 후 첫 번째로 시행한 이날 간담회는 김진철 사무국장과 7개 팀장과 군산시 신원식 부시장 등이 함께 참석해 도와 군산시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취약 분야에 대응한 맞춤형 청렴시책을 공유하는 등 진지한 토론의 장으로 진행됐다. 또한 도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도와 군산시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청렴시책을 논의하고 청렴업무에 대한 두 기관 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올해는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인 만큼 이에 걸맞는 청렴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14개 시·군과 함께 우수 청렴시책을 고민하고 공유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3일 2024년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시군 실무회의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제공)

## 도내 지역안전지수 향상 목표... 도-시군 힘 합쳐

### 전북자치도, 실무회의 열고 결과 분석 통한 맞춤형 추진전략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역안전 지수 향상을 목표로 시군과 힘을 합친다. 전북자치도는 3일 2024년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시군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안전지수란 행안부가 지자체별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안전 역량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를 5개(특·광역시, 도, 시, 군, 구) 그룹으로 나눠 상대 평가하고 매년 발표하는 지수이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2023년 지역안전지수 결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군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특히,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44개 전체 세부지표별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해 등급 결정에 영향이 크고 개선 가능한 세부 지표를 선정 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군산시와 김제시의 경우 전년 대비 등급이 향상된 범죄분야와 자살 분야에 대한 우수 사례를 소개해 다른 시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전북자치도는 올해 미흡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컨설팅 등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안전지수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 남원시의회, 복지부 항의 방문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정부가 지난 3월 의대 정원 2,000명을 확대하겠다고,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계획 발표에 지난 4월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납원 국립의정원 설립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남원 국립의정원 설립은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서남대 정원을 활용,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전북 남원에 설립하기로 된 사항으로,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대학 설립 부지 확정과 이에 따른 부지 매입을 52.9%까지 진행해 오고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학교) 결정 용역을 실시하는 등 남원 국립의정원 설립을 위해 사전 이행 사항을 진행해 왔다. 이날 항의 방문에 참석한 강인식 특위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남원시에 국립의정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협조 요청하여 그동안 남원시에서 적극 추진하였는데 이제 는 남원 국립의정원 설립에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전평기 의장(사진)은 “의대정원을 확대하면서 남원 국립의정원이란 단어는 언급조차 안되었다며, 남원 국립의정원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 “서민경제 회복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펼 것”

### 무소속 방수형 후보, 소상공인 소득보전 등 제시

무소속 방수형 후보(전주갑)가 3일 서민경제 부활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소득보전 △교통비·유류비 지원 △어르신 목욕비 지원 △육아돌봄 지원 등 약속했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과 창업 청년, 농업인 등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은행 설립’도 내걸었다. 방 후보는 “날이 갈수록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면서 “여기에 양질에 일자리도 줄어들면서 서민 경제는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수형 후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핵심 원인은 부자를 위한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한 뒤, “서민·중산층 중심 경제 전환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해결 방안으로 방 후보는 지역화폐

전북자치도는 지역안전지수 개선 실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위생요소(사방지수) 감소 사업, 중앙 컨설팅 공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문가 방문 자문, 지역안전수준 향상 컨설팅 결과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행안부의 지역안전지수(2025년 적용) 전반적인 개편(5개 분야 축소) 계획에 따라 관련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지표 발굴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형수 전북자치도 안전정책과장은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군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경위, 업무지휘 1호 축제 안전 강화 심의·의결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차철을 맞아 봄꽃 축제 등 지역축제 안전 관리에 발 벗고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일 제99차 정기회의를 열어 정전북경찰청 대대례계장으로 부터 ‘지역축제 등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지휘 1호를 심의·의결했다. 오는 13일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를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전주국제영화제 등 16개 다중운집 행사가 전북지역에서 개최되며 축제 기간 60여 만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선제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응해 도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업무지휘 1호인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강화’는 △자차체 주회 축제 등 적극 협업,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 선제적 안전관리대책 강구 △자율방범대 등 경찰 협력단체 적극 활용, 민경협력체계 강화 등으로 이뤄졌다. /김재훈 기자

## 전주 에코시티 옛 기무사 부지 전북교육청 이전 신축 가시화

### 민주 정동영 후보, 관계기관과 다각적 협의 착수



전주시 북부권 에코시티 주민들의 현안문제인 옛 기무사 부지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이전이 추진된다. 이 계획이 결실을 맺게 되면 북부권에 전무한 공공청사가 동지를 뜨는 첫 쾌거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후보(전주형)는 3일 기무사 부지에 전북교육청을 이전시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 전북교육청 부지는 전주시 교육청이 사용하고, 도교육청은 기무사부지에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이 계획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현 전주시 교육청 부지가 극히 협소해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은데다, 도교육청도 비좁은 청사 때문에 이전을 검토하면서부터다. 정 후보는 “기무사 부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 보던 중 도교육청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수뇌부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희망적인 답변을

얻어 됐다”면서 “기무사 부지를 무상 양여 받으려면 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신, 도교육청이 이전하게 되면 빠른 시간내에 부지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에코시티 상가부지 옆에 자리잡은 기무사 터는 2018년 기무부대가 해체된 이후 7년째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부지 규모는 3만 8천㎡(1만 1495평)에 달하는데 군사시설 특성상 3m가 넘는 장벽이 둘러 있고 감시초소도 남아있다. 정 후보는 전주시가 부지매입에 나설 경우 300여억원의 시비가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광주 31사단 기무사 사제처럼 무상양여를 받았다는 의지를 굳힌 바 있다. 그는 “항토사단이 이전하면서 함께 떠났어야 할 기무사가 존치되는 바람에 에코시티 일대 도시계획이 틀어지는 등 그 폐해를 고스란히 신도시 시민들이 떠안게 됐다”면서 “국회에 등원하게 된다면 국방부, 기재부 등과 가장 신속한 기무사 부지 활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